국민권익위원회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219-06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4월 |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2026 April I vol.160

Brief

1	『Speak Up Report 2025』에 따르면 공공자금 횡령의 80%, 사기·허위회계의 76.4%가 내부고발을 통해 적발
2	아일랜드 내부고발자의 37.5%가 보복을 경험했으며, 부정적 결과 경험(44%), 직장 상실 우려(32%), 변화 없음 인식(24%) 등과 함께 인식 격차(고용주 68% vs 직원 17%) 확인, 보호·신뢰 기반 운영체계 구축 필요
3	로레알, 익명·양방향 소통 기반으로 발생 시점·경위·장소 및 이메일·메시지 등 사실·증빙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신고 채널 운영
4	권익위, 반부패 법령 설명회 및 자문단 운영 통해 제도 이해와 정책 자문 기능 강화
5	EU, 반부패 지침 채택으로 회원국 공통 규제 체계 및 집행 기준 강화
6	스위스, ESG 법제 도입 추진…기업에 공시·실사 의무 및 제재 강화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4월 1일(매월발행, 통권 160호, 비매품)
발행인: 정일연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신청: 044-200-7163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일반민원상담 ☎110
부패공익신고 ☎1398

목차

1	윤리 체크리스트	내부고발 인식변화와 신고체계 점검 Transparency International Ireland, Speak Up Report 2025	
2	사례 돋보기	내부고발 채널 운영사례 로레알 (L'Oréal)	
3	윤리, 지금	권익위 동향	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역량 강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2026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 실시
			제 3 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
		국내외 동향	EU, 새로운 반부패 지침 채택…회원국 공통 기준 도입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스위스, EU 기준 맞춘 '지속가능경영법' 추진
			경기도,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 지원
4	윤리 네컷	청렴을 지키는 선택	
5	행사		

내부고발 인식변화와 신고체계 점검

Transparency International Ireland,
Speak Up Report 2025

- **내부고발 중요성:** 공공자금 횡령의 80%, 사기·허위회계의 76.4%가 내부고발을 통해 최초로 드러남
- **'신고 후 보호'의 문제:** 내부고발자의 37.5%가 보복을 경험했으며, 부정적 결과 경험은 21%에서 44%로 증가
- **내부고발 저조 원인은 두려움, 불신:** 직장 상실 우려(32%)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24%)이 확인됨

내부고발 인식 변화와 신고체계 점검 체크리스트

국제투명성기구 아일랜드 본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Ireland)는 2011 년부터 2024 년까지 운영한 헬프라인에 접수된 3,100 명 이상의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Speak Up Report 2025』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0~2024 년 접수된 1,432 건의 신고를 중심으로 내부고발의 유형과 보복 실태를 분석하고, 아일랜드 내부고발자보호법 (PDA)과 EU 내부고발자 지침 관련 판례 및 제도적 한계를 검토하며 실무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2023 년 직원 800 명과 고용주 35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Integrity at Work' 설문조사를 통해 내부고발에 대한 태도와 경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번 윤리 체크리스트는 이 중 인식 및 경험 변화 관련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고발은 부패 및 비위의 예방과 적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자금 횡령 사건의 80%, 사기 및 허위회계 사건의 76.4%가 내부고발을 통해 최초로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헬프라인 데이터 분석 결과, 2023 년 전체 상담자 중 내부고발자의 비율은 64%로 나타났다. 신고가 많이 이루어진 분야는 보건(13.3%), 사회서비스(9.0%), 자선단체(8.7%), 교육(8.1%)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 유형은 사기·허위회계(18.4%)와 법적 의무 위반(17.4%)으로 나타났다. 내부고발자의 37.5%는 신고 이후 보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조사 및 후속 조치 미흡 문제도 제기되었다.

2023 년 'Integrity at Work' 설문조사에서는 내부고발과 관련된 인식과 경험의 변화가 확인된다. 내부고발 이후 부정적 결과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4%로, 2016 년(21%)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직장을 잃을 것에 대한 우려'(32%)와 '신고 이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24%)이 제시되었다. 한편 고용주의 68%는 신고자 보호 의지를 나타냈으나 이를 신뢰하는 직원 비율은 17%에 그쳤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직 내 인식 역시 긍정과 부정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내부고발 채널 및 정책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외부 독립 신고 채널에 대한 안내를 내부 절차와 함께 제공할 경우 부정적 결과를 20.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이 외부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또한 익명 신고의 경우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인사 또는 징계 조치 이전에 보복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시한다. 아울러 신고 접수 후 7 일 이내 접수 확인, 3 개월 이내 처리 결과 통보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오른쪽 체크리스트는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내부고발 신고체계 점검 항목>

구분	점검 항목
채널 접근성	신고 채널이 익명으로 접근 가능한가?
	외부 독립 신고처 정보가 내부 절차에 함께 안내되고 있는가?
신고자 보호	보복 행위를 독립적인 조사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가?
	신고자에 대한 징계 전 보복성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있는가?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익명 신고에도 반드시 후속 조치하도록 규정화되어 있는가?
제도 운영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 접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신고자에게 3개월 이내 처리 결과가 통보되고 있는가?
	정책·채널 보유에 그치지 않고 신고 이후 실제 처리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조직 문화	여성 신고자에 대한 별도 보호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가?
	임직원 외 협력사·외부 관계자도 신고 가능하도록 채널이 열려 있는가?

참고

Transparency International Ireland, Speak Up Report 2025

사례 돋보기

내부고발 채널 운영 사례

사례기업: 로레알(L'Oréal)

핵심 키워드: #Speak up, #내부고발 채널, #신고자 보호

- 'Speak Up'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모두 윤리 위반 사항 보고 가능
- 6 개 핵심 신고 유형 분류 및 익명 신고 옵션(고유 ID 와 비밀번호 부여로 담당자와 소통가능) 제공으로 접근성과 심리적 안전감 확보
- 발생 시점, 인지 경위,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과 이메일, 메시지 등 내용 입증 자료 데이터 수집

로레알(L'Oréal)

로레알(L'Oréal) 그룹은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뷰티·화장품 기업으로, 2025년 에티스피어(Ethisphere) 재단이 선정하는 '세계 최고 윤리 기업(World's Most Ethical Companies)'에 16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에티스피어는 '윤리 지수(Ethics Quotient)'를 기반으로 기업 윤리 문화, ESG 관행 등 240개 이상의 항목을 평가하여 최고 윤리 기업을 선정한다.

로레알의 'L'Oréal Speak Up' 제도는 프랑스 Sapin II 및 Duty of Vigilance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임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지원자, 주주, 이사회 구성원, 협력업체, 고객 및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내부 신고 채널을 통해 우려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채널은 www.lorealspeakup.com을 통해 24시간, 30개 언어로 운영되며, 보고서는 최고 윤리·리스크·컴플라이언스 책임자에게 전달된다. 신고는 금전적 대가 없이 선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자는 해당 사실을 직접 알거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보고된 사실은 로레알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형사 행위(문서 절취, 불법 녹음 등)를 통해 취득한 정보는 신고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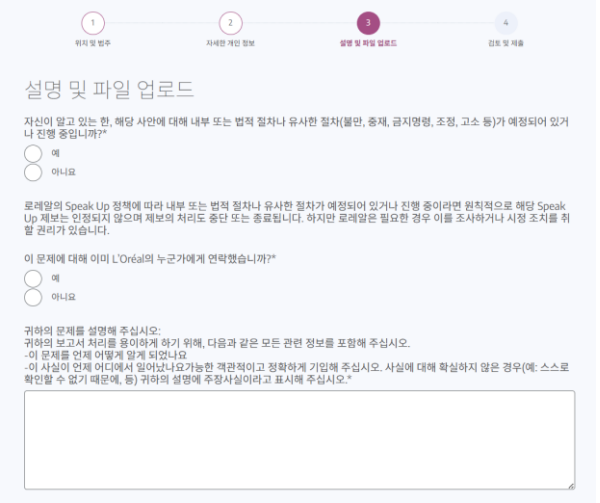
로레알은 신고 단계에서 인권, 건강·안전, 환경, 경제·재정적 이익, 윤리강령 위반, 보복 행위 등 6개 유형으로 신고를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보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생 시점, 인지 경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이메일, 메시지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익명 신고와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 시에도 고유 ID와 비밀번호가 부여되어 '대화 창구(Dialogue Box)'를 통해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다. 모든 신고 내용은 사건 처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게만 공유되며(need-to-know 원칙), 조사 관련자는 기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조사 정보는 암호화된 시스템에서 관리된다. 아울러 신고 처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에 대한 고지와 동의를 받으며, 내부 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제보의 처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한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는 보복 행위를 독립적인 신고 유형(6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선의로 이루어진 신고에 대해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신고자 보호를 제도화하여 보장한다.

<로레알-Speak up 채널 신고 유형>

신고 유형
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심각한 문제
② 개인의 건강·안전에 관한 심각한 문제
③ 환경에 관한 심각한 문제
④ 경제적·재정적 이해관계에 관한 심각한 문제
⑤ 윤리강령 및 내부 윤리 정책에 대한 기타 위반
⑥ Speak Up 신고 관련 보복 행위



[출처: L'Oréal, L'Oréal Speak Up]

참고

L'Oréal, Ethisphere Ratings
L'Oréal, L'Oréal Speak Up
L'Oréal, L'Oréal's Mutual Ethical Commitment Letter
L'Oréal, Speak Up Policy
L'Oréal, 2024 universal registration document

권익위 동향

권익위 정책

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역량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7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올해 상반기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과 위반 사례를 공유해 임직원의 법령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권익위는 법령 해설자료 제공과 내부 규정 제정 컨설팅 등을 통해 각 기관이 반부패 제도를 신속히 정착시키고 청렴한 업무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 년 3 월 27 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06626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5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 채용 기본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은 채용 심의기구 설치와 사전 채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채용 절차 점검 및 친인척 채용 여부 확인 등 공정성 관리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해 다음 전형 응시 기회 부여 또는 직접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권익위는 해설서 배포와 기관별 규정 점검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 년 4 월 6 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09490

권익위 활동

2026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공공기관 실무자의 반부패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5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청주·광주·서울·춘천·부산 등에서 진행되며,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등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현장 사례 기반 교육이 이뤄진다.

설명회는 3월 31일 청주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4월 30일 서울(포스트타워), 5월 14일 춘천, 6월 11일 부산 등 일정이 이어진다. 권익위는 '청렴포털' 활용법 등 실무 교육과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 년 3 월 31 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09035

제 3 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령 해석과 정책 추진 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 3 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11 일부터 2 년간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61 명으로 구성되며,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 운영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법령 해석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으로, 권익위는 이를 통해 반부패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청렴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 년 4 월 10 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09826

국내외 동향

반부패 정책

EU, 새로운 반부패 지침 채택…회원국 공통 기준 도입

유럽의회는 3 월 26 일(현지시간) EU 차원의 반부패 지침을 최종 채택하며 회원국 전반에 적용되는 통합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공소시효와 처벌 기준을 통일하고, 예방 조치와 함께 각국의 반부패 대응 수준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권력 남용 등 부패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를 강화해 각국 형사법 체계 개편을 유도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이번 입법을 통해 반부패 규범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회원국별 이행과 집행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유럽 국민당 그룹(The EPP Group) 홈페이지 2026 년 3 월 10 일 https://www.eppgroup.eu/what-we-do/with-eu-countries/malta/european-parliament-adopts-historic-anti-corruption-law-negotiated-by-david-casa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정부가 3 월 24 일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의결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개편이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10 월 2 일부터 기존 검찰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편되고,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돼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범죄 등 6 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되며, 이번 개편으로 1948 년 이후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됐다.

- 한경 BUSINESS 2026 년 3 월 24 일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3242844b

ESG

스위스, EU 기준 맞춘 '지속가능경영법' 추진

스위스 정부가 4 월 7 일 EU ESG 규제와 정합성을 맞춘 '지속가능 기업경영법(SCMA)' 도입을 추진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리와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의무를 차등 적용하는 2 단계 구조로, 초대형 기업에는 인권·환경 영향에 대한 실사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는 EU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와 외부 검증을 요구한다. 특히 분쟁광물·아동노동 등 고위험 공급망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규제를 적용하며,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과 공공조달 참여 제한, 해외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까지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가 포함됐다. 스위스는 EU 규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규제는 최소화해 기업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방침으로, 이번 법안은 ESG 를 단순 공시를 넘어 법적·재무적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확대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 ESG NEWS 2026 년 4 월 7 일 https://esgnews.com/switzerland-proposes-sustainable-corporate-management-act-aligned-with-eu-esg-rules/

경기도,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 지원

경기도는 4 월 8 일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U 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시행 등으로 ESG 대응이 필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도는 ESG 데이터 진단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지원, 인식 개선 교육(1 천명) 및 진단·개선 지원(300 개사)을 통해 기업의 기초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망 실사 대응 컨설팅과 에코바디스(EcoVadis) 등 국제 인증 지원을 통해 해외 바이어 요구에 대응하도록 돕고, 산업별 특화 포럼을 운영해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중에 경기기업비서(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연합뉴스 2026 년 4 월 8 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8042600061

윤리 네컷

청렴을 지키는 선택

행 사

윤경CEO서약식 “AI와 ESG의 융합: 세계 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기업의 미래 경쟁력”

기업 CEO와 함께 “AI와 ESG의 융합”을 통해 ESG 실행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AI 확산이 동반하는 에너지·물·거버넌스 이슈까지 책임 있게 논의하며, 대한민국 기업의 미래 경쟁력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시행되는 서약식.

- 주최: 윤경포럼, 산업정책연구원(IPS)
- 일정: 2026년 4월 30일(목)
-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91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
- 참고: https://www.ips.or.kr/05_03.php

Responsible Business USA 2026

정치적 변동 속에서 지속가능성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금을 보호하고, 이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이 성장, 회복력 및 영향력의 가시적인 동력이 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 나누는 행사

- 주최: 로이터(Reuters)
- 일정: 2026년 5월 5일(화)~5월 6일(수)
- 장소: 미국, 보스턴
- 참고: https://events.reutersevents.com/sustainable-business/responsible-business-usa/attendees

독자 의견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4월호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콘텐츠로 개선하려 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5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① 이번호에서 다룬 주제 또는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②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또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③ 기타 의견(다뤘으면 하는 주제, 기업 사례 등)

의견남기기 https://quiz.assist.ac.kr

2026년 4월 29일(수)까지
(1)'의견남기기' 페이지에서 응답하시거나
(2)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korea@assist.ac.kr) 앞으로
의견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기프티콘 당첨자 안내

김○민님, 박○수님, 강○규님, 오○현님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응답

★ 국민권익위에 문의하세요 ★

업무 중 궁금했던 제도·해석 사항이 있다면 독자 의견과 동일한 경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취합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문의 후 답변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① 상담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② 상담관지정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③ 사실관계조사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④ 결과확인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부패·공익신고는 ▶ 청렴포털 www.clean.go.kr ① 부패·공익신고 상담 및 안내 ② 부패·공익 침해 행위 신고 ③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청 ④ 신고 및 신청사건 결과조회